R&D 세제지원 호남엔 0.4% 뿐

민주당 이용섭의원 기획재정부 국감 지적

수도권에 80% 쏠려 … 지역 격차 더 커져

연구개발(R&D) 설비투자와 비용에 대한 세금혜택이 수도권에 편중되고 호남은 소외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용섭(민주·광산 을)의원은 20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R&D) 세제지원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R&D관련 각종 기업 세제지원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신성장 동력이나 원천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와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R&D 설비투자와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수도권이 각각 86.7%, 78.7%로 집중됐지만, 호남에는 0.4%와 1.6%만 지원됐다. 충청권(2.3%, 5.8%)과 경남권(4.3%, 8.6%), 경북권(6.2%, 5.3%)도 모두 한자릿수 지원에 그쳤다.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금혜택이 가장 적은 호남권의 경우, 단 4개 기업이 전체 지원액의 0.4%만 혜택을 받고 있으며, 법인당 평균 지원금액도 3100만 원으로, 경기권 기업의 2억6300만원의 9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또한 호남권 기업은 지난해 전체 세제 감면액 1조8417억 원 중 단 287억 원의 세금혜택만을 가져가 전체 지원액의 1.6%에 그쳤다.

이는 충청권 5.8%, 경북권 5.3%, 경남권 8.6%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호남지역 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극히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작년 수도권이 전체 1조7027억 원 중 1조 2838억원(75.4%)를 차지한 반면 호남권 기업은 523억원(3.1%)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이는 호남지역에 신규투자 비중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도 지난해 수도권이 전체 2573억원 중 1904억원(74%)를 차지했지만, 호남권 기업은 40억원에 그쳐 전체 세금혜택 대비 1.6%에 그쳤다.

이 의원은 "R&D설비투자와 비용에 대한 세금혜택의 수도권 집중이 시정되고 않고 있다"라며 "R&D인력과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액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이 3303억원으로 전체의 42.8%, 비수도권이 4406억원으로 57.2%를 차지했다.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은 수도권이 491억원(51.2%), 비수도권이 468억원(48.8%)이었다.

이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금혜택이 균형 있게 지원되려면 비수도권에 추가적인 세금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비수도권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추가적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보보호 구축전략 컨퍼런스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ISEC2011(국제 통합 정보보호 구축전략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보안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건설 노동자 체불 임금 119억원

광주시의회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방지·고용안정 보호 조례' 추진

광주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7월 말 기준 광주지역 건설근로자 체불임금은 총 4638명에 119억원에 달했다.

건설분야의 체불근로자와 체불임금 비율은 전체 산업의 13.7%와 16.4%로 건설업이 차지하는 취업자 비율(7.3%)을 감안하면 2배 높은 수준이다.

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체불임금만 총 55건, 1005명, 86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같이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고질화됨에 따라 광주시의회가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 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는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 현장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 불법하도급 지도·단속,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되풀이되는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조례 발의를 환영하고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환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학생 취업 선호도

삼성전자 1위

대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 1위에 삼성전자가 꼽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이지서베이와 공동으로 전국 대학생 1048명을 대상으로 '일하고 싶은 기업'에 대해 설문한 결과 가장 많은 8.4%의 응답자가 삼성전자를 선택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 설문에서 2004년부터 8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인크루트측은 전했다. 다음으로는 국민은행(6.2%)과 대한항공(6.1%), NHN(5.2%), CJ제일제당(3.9%), 포스코(3.4%),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3.1%)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자동차(2.9%)와 신한은행(2.8%), 한국전력공사(2.6%) 등도 10위권에 포함됐다. 삼성전자와 국민은행은 '만족스러운 급여와 투명하고 공평한 보상제도'를 선택의 이유로 밝힌 응답자가 많았다. /연합뉴스

광주 광산업 선도 '피피아이' 첨단기술기업 제1호 지정

광파워분배기 공급

상반기 매출 101억

광주의 대표적 광통신업체인 (주)피피아이가 첨단기술기업 제1호로 지정됐다.

지식경제부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광주기술사업화센터는 20일 "올해 초 광주특구가 지정된 후 처음으로 특구 내 광통신 기업인 (주)피피아이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첨단기술기업은 첨단기술·제품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총 매출액의 30%이상 첨단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또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 차지해야 한다.

이번에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피피아이는 특구법에 따라 법인세의 경우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받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다. 또 기술보증기금 지원 때 가점과 보증료의 0.2% 감면받는다.

광주특구 첨단기술기업 제1호인 피피아이는 평판 광회로기술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고속통신망인 FTTH(댁내광가입자망)의 핵심부품인 광파워분배기와 광파장분배기를 국내·외 통신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광주 광산업 선도기업이다.

올 상반기 매출 101억원, 당기순이익 36억원을 기록, 지난해(연 156억원)대비 30%의 성장세를 보였다. 또 광모드변환기 등 16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테크노파크·자동화설비공고

인재양성·취업촉진 업무협약 체결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와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교장 김두천)는 20일 테크노파크 중회의실에서 지역 기능인재 양성과 고교 졸업생들의 취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예비인력 교육을 위한 시설·장비 사용과 온·오프라인 교육 등 지역혁신 인력양성, 기능인재 취업을 위한 중소기업 취업연계 및 청년창업 지원 등을 협력해 지역 고교 기능인재의 유출을 막을 방침이다.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광주 유일의 마이스터고인 광주자동화설비공고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기능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며 "지역기업의 우수한 기초·생산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학력보다는 실력이 인정받는 사회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온누리상품권 회수율

광주 79·전남 99.3%

광주지역의 '온누리상품권' 회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민식(한나라당) 의원이 내놓은 '전국 16개 시·도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및 회수액'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온누리 상품권 발행 이후 올 8월까지 광주지역의 판매액은 39억2400만원으로 이중 30억88만원(78.7%)만이 회수돼 전국 평균 82.4%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은 같은 기간 292억2200만원어치가 판매됐으며 290억2100만원이 회수돼 99.3%의 회수율을 보인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박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은 지역경제와 전통시장을 살리는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판매액만큼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837.97 (+17.03)
▲ 코스닥지수	470.11 (+7.27)
▼ 금리 (국고채 3년)	3.49% (-0.02)
▲ 원·달러 환율	1148.40원 (+11.4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